

北 3차 핵실험 폭발력 6~9kt이냐, 40kt이냐

국방부-獨 지질연구소 발표 달라 논란

‘비핵화’ ‘확산방지’ 정책 충돌 가능성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과연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었을까.

국방부는 12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타가 인공지진과 4.9 규모를 ‘유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기구(UNBTO)’의 산출공식에 근거해 다이너마이트(TNT) 6~9kt의 폭발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1차 핵실험(2006년) 당시의 1kt이나 2차 핵실험(2009년) 당시 2~6kt의 폭발력보다는 컸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21kt)와 히로시마(16kt)에 투하했던 핵폭탄의 폭발력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독일 정부 산하 연방지질자원(BER) 연구소는 북한의 3차 핵실험 폭발력이 40kt에 달한다고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BER이 추정한 폭발력은 한국 국방부는 물론 미국이 추정한 ‘몇 kt’, 러시아의 ‘7 kt 이상’과 비교해도 가장 큰 수치다.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핵무기 폭발력의 산정방식이 본래 자체나 실험 당시 환경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은 진도 규모에 따른 위력이 다르게 평가된다.

진도 규모가 10이 올라갈 때 자연지진의 경우 32배 증가하지만 핵실험 같은 인공지진은 10배 올라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12일 3차 핵실험 당시 감지된 4.9 규모의 ‘인공지진’ 진도를 실제 얼마나 평가할지는 앞으로 핵실험 이후 포집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면 히로시마급 핵폭탄의 위력(16kt)을 보이려면 인공 지진 진도 4.7~4.8이 꽤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감지된 4.9 규모라면 20kt 이상, 심지어 독일의 BER처럼 40kt에 달하는 폭발력도 가능하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위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핵능력을 제대로 파악해야 실효적인 외교 정책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히로시마급 이상의 핵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명되면 이는

2003년부터 가동해온 북핵 6자회담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무의미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핵군축 회담’으로 성격이 변질될 가능성까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베락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밤(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

한 무기들의 확산을 막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임을 천명한 것은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의 중심이 비핵화에서 ‘확산방지’로 중심이 동할 개연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비핵화를 정책적 목표로 여전히 상정하고 있는 한국과 ‘정책 목표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양국이 북한 정책을 놓고 고용복지부와 인수위원회는 14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북한은 12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이번 핵실험의 “그 위력과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의 핵실험을 관측한 적들 자신이 잘 알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회원들이 14일 서울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사회와 공조, 대북압박 펼쳐야”

김총리 “추가 핵실험 가능성 항상 존재”

국회대정부질문

국회의 14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모두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배경과 대응책을 주권했다.

새누리당은 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과 대북정책의 재정립에 주안점을 둔 반면,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책임을 주고 대화 등 전략적 관리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이날 “한반도 주변 6개국 간의 일치된 행동과 함께 실질적인 제재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뒤,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나서서 군사적 노력을 비롯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한 뒤, 우리와는 상대도 않으면서 이를 통해 통일봉남을 실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중국으로부터 효과적인 협력을 얻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공들여 쌓아온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긴장과 대결로 몰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력화된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성명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타협을 모색해 지난 2000년 추진된 김대중-클린턴 모델식의 일괄타결 방식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경도의 내용 등으로 비춰볼 때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이명

박 정부에 대한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진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현정 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종학 의원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오직 현 정부 기간에만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경제 분야 실정을 비판했다.

이에 김 국무총리는 “물러나는 총리로서 정치권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며 “정부에서 행한 모든 정책 중에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현 정부를 엄호했다. 김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인사, 4 대강 사업 등에 대해 해명할 때는 애당 의원들에게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또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지난 4·11 총선을 앞

이른바 ‘인기부 X파일’에 들어 있는 내용인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57) 의원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새누리당 이재균(59·부산 영도)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사무장의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